

금융회사/대부업의 현황 및 법적 규제

陳欣男변호사、林思宇변호사 、林孜俞변호사

금융회사/대부업자 현황
그리고
정부의 대응

陳欣男 변호사

대만의 금융업체(대부업자) 현황

- 민간 회사의 대출을 규제하는 구체적인 법률도 없고, 이를 규제할 기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 1. 신용조회 체계 없음: 금융회사들이 금융신용보고체계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신용 조회를 정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 2. 대출 한도 없음: 금융 기관은 일반적으로 소득에 따라 신용 한도를 설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의 22배입니다. 그러나 민간 금융업자에게 그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 3. 이자 상한 없음: 해지 수수료, 취급 수수료 등 다양한 명목을 이용해 사실상 민법이 규정한 16% 넘는 이자를 받습니다.
- 4. 사기 집단과의 공모하는 경우가 많음

대만의 금융업체(대부업자) 현황

사기 집단과 공모의 수법

경제일보: 평생의 빚 / 사기 집단, 대행사, 금융 회사들이 실업자, 노인, 순진한 사람들을 착취하기 위해 힘을 합친다.

(<https://pse.is/83t7gk>, 마지막 조회일 2025.09.01)

- 1. 가짜 투자 대행사를 운영하면서 대행사가 투자비용을 마련하도록 함
- 2. 가상 화폐를 투자하게 유인한 뒤 금융회사가 큰 비중의 이윤을 가져감.
- 3. 약속어음은 여러 서류들과 섞여 , 피해자 부주의 시 서명하게 됨
- 4. 대출 계약을 매매 계약으로 대체하여 대출 금액을 마음대로 설정함

대만의 금융업체(대부업자) - 입법 진행 상황

- 2024년 7월 5일, 민간 단체 해당 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 2025년 3월 31일, 황산산 의원이 금융회사법에 대한 공청회를 소집했습니다.
- 금융감독위원회는 2025년 4월 22일 5개 규제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https://pse.is/82zszm>(마지막으로 114.08.25에 확인됨)

- 2025년 5월 22일, 입법원 재정위원회는 금융회사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 2025년 9월 1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금융리스회사 13개가 포함되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5개의 규제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조 제1항, 주관기관이 고시한 기타 금융서비스업에 관한 규정 초안

금융 서비스업의 광고 업무 및 판촉 활동을 규제하는 규정 개정안 초안

금융서비스업이 금융상품·서비스 제공 전 중요 계약조건 및 리스크 설명에 관한 규정 수정초안

금융서비스업이 적합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안 초안

금융소비 분쟁해결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제29조 개정안 초안

금융감독위원회는 5개의 규제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조 제1항, 주관기관이 고시한 기타 금융서비스업에 관한 규정 초안

1. 시장 지배력을 가진 4개 상장그룹 산하 12개 금융리스회사는 주된 목표입니다. 이 회사들이 개인을 대상으로 채권 매입, 할부금 거래, 기타 이와 유사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말하는 금융서비스업에 포함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5개의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고시한 기타 금융서비스업에 관한 규정안

2.포함된 회사: "中租迪和、合迪、中租汽車租賃、仲信資融、裕融企業、新鑫、裕富數位資融、和潤企業、和勁企業、和潤興業、日盛台駿國際租賃、日盛台駿全實業"(위의 모든 회사는 법인회사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5개의 규제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 서비스업의 광고 업무 및 판촉 활동을 규제하는 규정 개정안 초안

1. 이자율 및 수수료 공개:

금융리스 회사가 광고, 영업행위, 판촉 활동을 하는 경우 이자율과 수수료를 연이자율 및 총비용 퍼센티지의 방식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제4조 개정)

2. 광고

금융리스회사가 타인에게 영업행위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받은 자의 광고, 영업행위 및 판촉활동이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감독관리 및 정기검사 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제7조 개정)

금융감독위원회는 5개의 규제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서비스업이 금융상품·서비스 제공 전 중요 계약조건 및 리스크 설명에 관한 규정 수정초안

1. 금융리스회사는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이자율 및 이자 산정방식을 설명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 보증인 등을 대리하여 서명하거나, 그들의 동의 또는 승인 없이 계약서류를 작성하면 안 됩니다. (제5조 개정)
2. 금융리스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조기상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조기상환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약금의 산정 및 징수 방식은 금융소비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제10조 개정)
3. 금융리스회사는 직접 채권 추심을 하든 외부 채권추심 전문업체에 위탁하든 부적절한 채권추심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또한, 외부 채권 추심 전문업체에 대한 선정 기준, 감독 및 관리 체계, 정기 감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제11조 개정)

금융감독위원회는 5개의 규제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서비스업이 적합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안 초안

1. 금융리스회사는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금융소비자의 상황은 파악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11조의1 개정)

2. 금융리스회사가 대출금액에 대한 제한. (제11조의2 개정)

(금융리스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대출 금액은 신청 당시 거래 목적물의 가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5개의 규제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소비 분쟁 해결 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금융리스회사가 분쟁 해결 서비스 수수료와 그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26조의2 개정)

해당 항목은 1. 평가 속성 2. 기타 속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금융리스회사는 각각 NT\$20,000과 NT\$8,000의 서비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만 민간판 대부업법 초안 소개

林思宇

대만 대부업법 초안

- 최근 대만 사회에서는 차량 소유권 과도 대출, 휴대폰 대출, 그리고 허위 거래로 위장한 대출 등 관행이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출자에게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백지 어음을 요구하거나, 지나치게 높고 불투명한 이자 및 위약금, 그리고 사기 조직과의 공모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대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관리하는 법이 없으며, 시민단체들은 혼란을 해소하고 다음 금융 위기를 피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중입니다.

입법 목적

- 2008년 초 대만 행정원은 "융자회사법"을 제정했습니다. 당시 입법 목적은 "기업과 개인의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다각화된 자금 조달 경로를 구축하고, 외국 금융회사의 대만 투자를 유치하며, 국내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 민간판 대부업법 초안은 이미 수천억 대만 달러를 조달한 금융회사들이 야기하는 문제점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입법 목적은 "기업 및 개인의 자금 조달 경로를 개선하고, 대부산업의 운영과 발전을 개선하며, 고객과 대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주관 기관

- 2008년 행정원의 용자회사법 초안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주무기관으로 규정했습니다.
- 경제부 산하 상무관리처는 회사 등록만 담당하며, 규제 및 관리에 대한 경험은 없습니다.
-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 감독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이 있고, 다수의 하위 규정이 있습니다.

주관기관의 행정감독

- 대부업자는 주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5년마다 허가를 재신청해야 합니다(제10조).
- 대부업자가 면허를 차용해서는 안 되며(제12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42조).
- 연례 보고서 작성 의무(제32조), 검사 수락 의무(제33조)있습니다.

주관기관의 행정감독

- 대부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주관기관은 대부업무를 정지하고, 업자의 관계인을 해임하고, 허가를 취소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제35조)
- 지배회사는 자회사가 규정 위반 여부를 감독해야 합니다. 자회사가 이 법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주관기관은 지배회사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지배회사 및 그 자회사의 대부업무를 정지시키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제36조).
- 대부업무과 관련된 부적절한 온라인 광고 발견 시, 주관기관은 먼저 불법적인 웹페이지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이를 삭제해야 합니다(제38조).

주관기관의 업무감독

- 최대 대출금액(제15조)
- 최대 이자율 및 위약금(제16조)
- 부정 행위 및 적당하지 않은 광고의 금지(제17조)
- 계약서 내용의 필수 사항 및 기재하면 안된 사항. 고객에게 계약서를 제공해야 함. 대출 금액이나 이자율은 공백으로 남겨서는 안 되며, 공백 어음에 사인을 요구하면 안됨.(제18조).

주관기관의 업무감독

- 채무 추심은 제3자에게 행하면 안됩니다. (제21조)
- 부당 채권추심금지(제25조)
- 사기 집단과의 공모 금지(제30조)

영업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 영업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은 제42조부터 제46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 유예 처분을 받습니다. 위반자가 주관 기관의 중단 또는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을 받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 세 번째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구류 또는 1천만 대만 달러 이하의 벌금을 포함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업 관련 인원의 자격

- 책임자의 필수 자격(제5조), 부적합 자격(제6조)
- 업무원에 대한 필수 자격, 자격증 및 훈련(제8조), 부적합 자격(제9조)
- 채권추심원의 부적합 자격(제24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대부업을 규제 시
직면한 문제들

林孜俞 변호사

역사적으로 보면,
대부회사에 대한 특별법 문제는 최근에 생긴 의제가 아니다.

- 행정원은 2008년 초 금융감독위원회에 ‘융자회사법’ 초안을 입법원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도록 요청했으며, 특별법을 통해 대부회사를 관리하는 외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입법을 통해 통일된 규제 체제를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에 발생한 금융위기로 인해 이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각 금융 서비스에는 전문법과 규정이 있습니다.

금융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금융서비스업이란:

- 은행업→은행법
- 증권업→증권거래법
- 선물 산업→선물 거래법
- 보험업계→보험법
- 전자결제 산업→전자지불 관리규정
- 대부업→?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입법 배경

-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해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커다란 손실을 입었고, 금융 기관의 채권 발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높아졌습니다.
- 금융 서비스는 전문적이고 복잡합니다. 때문에 소비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의 재정 자원, 정보, 그리고 전문성의 상당한 격차로 인해 거래 분쟁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 때 사법으로 해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번거롭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금융 전문성, 공정성, 그리고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제정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2011년 6월 3일에 금융보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내용_ 31개의 조례가 포함

■ 금융 소비자 보호

- 계약은 공정성, 합리성, 평등, 호혜성, 성실의 원칙에 따라 체결되어야 합니다.
- 업무 및 판촉 활동을 할 때 허위, 사기, 은폐 또는 다른 사람을 오도할 수 있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금융서비스 제공자는 금융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의 관련 정보를 철저히 이해해야 합니다.
- 금융서비스 제공자는 금융상품, 서비스, 계약의 필수 내용, 리스크 그리고 규정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 금융 소비자 분쟁 해결:

- 금융소비자 소비평의센터

용자회사법 초안 VS 금융보호법 및 하위법

규범 내용	민간판 대부업법 초안	금융보호법 하위법 초안	금융보호법 하위법 수정
표준화된 계약 조건: 공정하고 합리적	○	○	○
광고에는 표준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과 포함 안 될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X	X
공백 어음은 금지	○	X	○
계약 위반 시 최대 벌금	○	X	X
최대 대출 금액	○ 담보품 유무 구별	△거래물의 가치를 초과할 수 없는 규제	
업무 및 광고 행위 규범	○	○	○

용자회사법 초안 VS 금융보호법 및 하위법

규범 내용	민간판 대부업법 초안	금융보호법 하위법 초안	금융보호법 하위법 수정
청산 증빙 제출 의무	○	X	○
원칙적으로 조기상환에 대한 벌금은 부과하면 안됨	○	X	X
대부업 관리자 및 영업원에 대한 긍정적 및 부정적 자격 제한	○	X	X
영업사원의 자격증 및 업무 관련 규범	○	X	X
대부업의 설립 및 영업허가에 관한 규정	○	X	X

용자회사법 초안 VS 금융보호법 및 하위법

규범 내용	민간판 대부업법 초안	금융보호법 하위법 초안	금융보호법 하위법 수정
원칙적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채무추심 금지	○	X	X
채권 추심인원 자격	○	X 회사 자율 규제	
부적절한 채무추심 및 채무추심 위탁 관련 규정	○	△회사 스스로 규정	
청구권 양도에 대한 제한	○	X	○
책임자, 실무자 및 영업사원에게 부당한 이익 수수 금지	○	X	X

용자회사법 초안 VS 금융보호법 및 하위법

규범 내용	민간판 대부업법 초안	금융보호법 하위법 초안	금융보호법 하위법 수정
대부업계와 사기집단 간 공모 금지	○	X	X
자회사 및 하위 회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지배 회사의 책임	○	X	X
인터넷 플랫폼, 인터넷 서비스 제공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	X	X
대부 산업협회 규정	○	X	X
행위 규범 위반에 대한 처벌	○	△법적 권한 분쟁	

법적 권한 분쟁: 위헌심사 논란

- 사법원 대법관 해석 제313호

행정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국민에게 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처벌의 대상과 금액은 법률로 정해야 합니다. 법률이 명령을 통해 처벌 대상에 대한 보충 조항을 허용하는 경우 그 내용과 범위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명령이 국민의 권리를 법률로 제한한다는 헌법 제23조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변명

- 대출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소비자와 중소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가 더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사적 금융에 오히려 더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 질문: 현재 대부회사는 완전히 규제되지 않고 높은 이자율, 공백 약속어음, 지나치게 높은 채무 불이행 벌금과 수수료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이 지하은행과 어떻게 다르니까? 중소기업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은 상관없다고 표시한 적이 있습니까?

금융감독위원회의 변명

- 법규의 진짜 목적은 규제의 강력함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대부회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리한 법적 수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 질문: 20년 전에 대만 사회에서 심각한 카드 사건이 있었습니다. 70만 명에 달한 신용카드 채무자가 생겼을 때 금융감독위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소비자 보호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왜 신용카드의 노예가 된 사람은 70만 명이나 달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영리한 법적 수단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오직 입법원에서 통과된 법률 조항뿐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변명

- 대부회사를 둘러싼 주요 쟁점은 소비자 보호에 있습니다. 대부회사는 특허 받은 업종도 아니고, 공적 자금을 흡수하는 기관도 아닙니다. 일반 국민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회사를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질문: 대부회사는 공적자금을 흡수하지 않지만, 대부회사를 규제하는 법규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과 새로운 유형의 부채가 급증하는 것은 사회 문제로 삼지 않습니까?

금융감독위원회의 변명

- 금융보호법을 위반하는 자에게 최대 1,000만 대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며, 이는 특별법보다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질문: 엄격한 규제로 인해 소비자와 중소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진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이 법안 초안에 따르면 최대 벌금은 50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한편으로는 과도한 엄격함을 두려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처벌이 엄하다고 강조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정말 법안을 심중하게 고려하는 겁니까? 또한, 금융감독위원회는 대부회사가 대출하기 전에 대출 상대의 재정 상태, 신용도, 대출 현황 그리고 자금 필요 사유를 파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천만 대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벌칙이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대부회사가 그런 규정에 따를 것 같습니까? 결국 이러한 규정은 단지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입니까?

채무자들의 비극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 가오슝에서 5명이 사망했습니다! 막대한 신용카드 빚을 지고 있는 부부, 28세 여성이 빚을 갚기 위해 매춘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1월 22일 원천: TVBS 뉴스 네트워크

가오슝에서 5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3명의 어린 자녀(3세, 6세, 7세)를 둔 28세 부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부부는 신용카드 빚, 자동차 할부금, 그리고 기타 빚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극심한 재정적 압박으로 아내는 위법한 업조를 종사했지만, 여전히 재정적 문제 해결할 수 없었고, 결국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 부부는 빚을 갚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대부회사와 은행으로부터 지급명령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고, 이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내는 빚을 갚기 위해 직장을 바꿔 불법 산업에 종사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녀는 동료들에게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고 출근을 중단했습니다. 동료들은 이에 크게 당황하여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언을 해주세요!

오키나와 부세나 해중공원(部瀬名海中公園)



서울 삼청동 (Samcheon-dong)



최근 대만 사회에서는 차량 소유권 과도 대출, 휴대폰 대출, 그리고 허위 거래로 위장한 대출 등 관행이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출자에게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백지 어음을 요구하거나, 지나치게 높고 불투명한 이자 및 위약금, 그리고 사기 조직과의 공모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대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관리하는 법이 없으며, 시민단체들은 혼란을 해소하고 다음 금융 위기를 피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중입니다.

2008 년 초 대만 행정원은 "융자회사법"을 제정했습니다. 당시 입법 목적은 "기업과 개인의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다각화된 자금 조달 경로를 구축하고, 외국 금융회사의 대만 투자를 유치하며, 국내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민간판 대부업법 초안은 이미 수천억 대만 달러를 조달한 금융회사들이 야기하는 문제점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입법 목적은 "기업 및 개인의 자금 조달 경로를 개선하고, 대부산업의 운영과 발전을 개선하며, 고객과 대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양자의 출발점은 매우 다릅니다.

대만 금융감독위원회는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규정으로 감독하고 있는 반면, 경제부 산하 상무관리처는 기업 등록만 할 뿐 감독에 관련 경험이 전무합니다. 따라서 민간판 초안의 제 2 조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주관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판 초안에 따르면 관리 업무는 행정 감독과 유관 기관의 업무 감독으로 구분합니다. 행정 감독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제 10 조는 대부업자는 영업을 하기 전에 관할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5 년 후에 재신청해야 하므로 부실한 업자는 배제됩니다. 이는 일본 대부업법을 참조하였습니다. 제 12 조는 대부업자가 면허를 차용해서는 안 되며 위반자는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대부업 허가를 받은 후 허가 없는 타인에게 면허를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규정으로는 연례 보고서 작성을 요구하는 제 32 조, 감사 수락을 요구하는 제 33 조, 손실 보고를 요구하는 제 34 조가 있습니다. 대부업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 35 조는 관할 당국이 대부업을 정지하고 관련 인원을 해임하고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행정감독에 관해서 가장 주목할 만한 조항은 제 36 조입니다. 지배회사가 자회사의 법을 위반 여부는 감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회사가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주권 기관은 지배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지배회사 및 그 자회사의 자금조달을 정지시키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모회사인 지배회사가 관련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자회사 또는 관련 회사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및 소셜 미디어 광고가 만연하는 현 상황에 대응하여, 제 38 조는 부적절한 정보의 지속적인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주권 기관이 부적절한 온라인 광고 관련 불법 웹페이지 및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삭제해야 합니다.

주권기관의 업무 감독 측면에서 볼 때, 현재 대출 규모는 매우 놀랍습니다. 가치 없는 오토바이를 20 만 대만 달러, 휴대전화를 30 만 대만 달러로 대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들은 빚을 이용해 빚을 갚는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제 15 조는 무담보 채무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무담보 채무와 합산해야 하며, 상한은 평균 소득의 22 배로 규정합니다. 이자율과 위약금에 관해서는 대부업이 적금을 받지 않고 자본 비용이 높으며 고객의 신용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 205 조는 제외됩니다. 제 16 조는 약정 이자율이 연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부분은 무효라고 규정합니다. 법률 상담 과정에 많은 채무자들이 자신이 서명한 계약서의 내용을 명확히 알지 못하고, 계약서를 전혀 소지하지 않으며, 심지어 백지 약속어음에 서명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제 18 조는 계약서에 기재사항과 기재하지 아니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고객에게 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출 금액이나 이자율은 백지 상태로 두어서는 안 되며, 백지 약속어음에는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추심에 관하여 제 21 조는 제 3 자에 대하여 채권추심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25 조는 부당 채권추심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 조직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부업계 관계자들이 사기 조직과 결탁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제 30 조는 사기 조직과의 협력에 대한 관련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은 제 42 조부터 제 46 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 유예 처분을 받습니다. 위반자가 주권 기관의 중단 또는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을 받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 세 번째 위반 시에는 5 년 이하의 징역, 구류 또는 1 천만 대만 달러 이하의 벌금을 포함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업 관련 인원 규정은 법에 포함해야 해야 합니다. 제 5 조는 대부업 책임자 자격의 필요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제 6 조는 그 자격을 배제하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제 8 조는 대부업 직원의 필요 조건, 면허 및 훈련을 규정하고 제 9 조는 그 자격을 배제 하는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 24 조는 채권추심원의 자격을 배제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진보당 왕스첸 의원과 인민당 황산산 의원은 융자회사법 초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민간판의 초안과 거의 동일하지만 규제 대상은 대부회사로 제한했다는 점이 다릅니다. 채무자는 사회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단체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2025 년 대만, 일본, 한국 세미나 연설
林孜俞(린쯔위) 변호사

I. 금융감독위원회는 2014 년 4 월 23 일, 中租、裕融、和潤 그리고 日盛台駿 등 4 개 상장그룹 산하의 12 개 금융리스회사를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보호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이는 제 1 단계 조치입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彭金隆(펑진룽)은 금융리스회사가 금융기관이 아니며 금융감독위원회(FSC)의 관할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FSC 는 이미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 문제를 규제하고 은행에게 대출 후에 은행의 신용 관리 및 대출 용도 관리는 강화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제 2 단계와 제 3 단계에서는 은행이 투자한 13 개 금융리스회사를 관리하에 편성됩니다. 제 3 단계에는 협회에 가입한 나머지 15 개 금융리스회사가 포함되어 총 40 개 대부회사가 모두 금융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 2 단계와 제 3 단계 규제는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내년까지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 없음을 의미하며, 국민의 기대와는 큰 차이가 있어 큰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II.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 역사적으로 볼 때 대부회사 특별법 문제는 최근의 문제가 아니다.

2008 년 초, 대만 행정원은 금융감독위원회(FSC)에 "융자회사법" 초안을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당시 대부업계에 대한 통일된 규제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FSC 의 중앙집권적 관리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해 금융 위기로 인해 무산되었고, 나중에는 담당 기관이 누구인지 파악할 수 없어 이 법안이 보류되었습니다. 대만의 대부업 시장은 오랫동안 불분명한 영역에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자금 조달의 유연한 원천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수많은 잠재적 위험도 있습니다. 2024 년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업무를 인수하여 연구기관에게 특별법 시행의 타당성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상세 보고서가 접수될 예정입니다. 이 보고서는 시장 상황에 대한 개요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위원회가 대만 시장에 적합한 통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법적 관점에서 볼 때, 각 금융 서비스 산업에는 자체적인 특정 법률과 규정이 있습니다.

은행, 증권, 선물 거래, 보험 등

3. 40 개 대부회사에 대한 규제를 행정적으로 실시하고, 4 개 하위법을 개정합니다. 이것 만으로는 대부회사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금융보호법의 입법 배경: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 보호 신청을 하면서 수만 명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커다란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의 연계채권 발행 관련 문제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이 촉발되었습니다. 당국은 금융 서비스 업계의 소비자 보호가 적절한지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수단 외에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일반 대중에게 금융 상품 및 금융 서비스와의 접근이 증가하고, 이러한 서비스는 전문적이고 복잡합니다. 때문에 소비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의 재정 자원, 정보, 그리고 전문성의 상당한 격차로 인해 거래 분쟁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 때 사법으로 해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번거롭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금융 전문성, 공정성, 그리고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제정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2011년 6월 3일에 금융보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 이 법의 내용: 공백어음 문제, 대부업 책임자 및 영업사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 영업사원의 면허 및 자격증에 관한 업무 규정, 채권추심업자 및 그 행위에 관한 규정, 대부업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부업과 사기집단에 관한 규정, 자회사 및 계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모회사의 책임, 온라인 플랫폼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금융산업 협회에 관한 규정 등입니다.

4. 금융감독위원회가 4개 하위법을 개정하는 것은 모법의 허가 범위를 넘은 우려가 있고 법률 유보의 원칙에 위반 여부에 논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III. 금융감독위원회의 변명

금융감독위원회가 처음에 대부회사는 금융기관이 아니며, 대부회사의 대출 업무는 특허 받은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론의 영향과 여러 의원들의 질의를 받으면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입장을 바꾸었고 시장의 주요 대부회사들을 점진적으로 감독하에 두는 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보호법의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만 대부회사들을 관리할 의향이었고, 특별법 제정에는 여전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용자회사법" 초안은 2008년 초 입법원 심의를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러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제 더욱 시급한 시점이 되면서도 여러 변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대출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소비자와 중소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가 더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사적 금융에 오히려 더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현재 대부회사는 완전히 규제되지 않고 높은 이자율, 공백 약속어음, 지나치게 높은 채무 불이행 벌금과 수수료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이 지하은행과 어떻게 다릅니까? 중소기업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은 상관없다고 표시한 적이 있습니까?

2.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법규의 진짜 목적은 규제의 강력함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대부회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리한 법적 수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질문: 20 년 전에 대만 사회에서 심각한 카드 사건이 있었습니다. 70 만 명에 달한 신용카드 채무자가 생겼을 때 금융감독위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소비자 보호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왜 신용카드의 노예가 된 사람은 70 만 명이나 달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영리한 법적 수단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오직 입법원에서 통과된 법률 조항뿐입니다.

3.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대부회사를 둘러싼 주요 쟁점은 소비자 보호에 있습니다. 대부회사는 특허 받은 업종도 아니고, 공적 자금을 흡수하는 기관도 아닙니다. 일반 국민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회사를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문: 대부회사는 공적자금을 흡수하지 않지만, 대부회사를 규제하는 법규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과 새로운 유형의 부채가 급증하는 것은 사회 문제로 삼지 않습니까?

4.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금융보호법을 위반하는 자에게 최대 1,000 만 대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며, 이는 특별법보다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 엄격한 규제로 인해 소비자와 중소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진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이 법안 초안에 따르면 최대 벌금은 500 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한편으로는 과도한 엄격함을 두려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처벌이 엄하다고 강조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정말 법안을 심중하게 고려하는 겁니까? 또한, 금융감독위원회는 대부회사가 대출하기 전에 대출 상대의 재정 상태, 신용도, 대출 현황 그리고 자금 필요 사유를 파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 천만

대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벌칙이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대부회사가 그런 규정에 따를 것 같습니까? 결국 이러한
규정은 단지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입니까?

IV. 결론

20년 전에 일어난 카드 사건에서 얻은 교훈은 과도한 신용 팽창이 심각한
사회 문제와 수많은 가족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이 문제를 규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꺼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습니다.